

연금시장리뷰

경제현안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산업 이슈: 동유럽 신흥 시장 소개 : ①폴란드 (요약)

경제 이슈: 지하경제 해소 방안

퇴직연금

이슈: 악화일로의 청년층 고용과 절실한 노후 준비

세심록

경험과 기억 사이의 혼동

Book Review

A Grand Illusion? An Essay on Europe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현안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우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국내 경제 지표 부진 지속

-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도 모두 부진
 - **고용**: 1월 중 고용은 신규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32.2만 명 증가하여 지난달(27.7만 명)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고용률은 57.4%로 3개월 연속 60%를 하회
 - **생산·소비·투자**: 지난 1월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모두 전월대비 1.5%, 0.9% 감소했고, 소비와 설비투자도 각각 2.0%, 6.5% 줄어듦
- 미국의 예산자동삭감 조치인 시퀘스터 시행, 이탈리아 정치불안 등 대외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국내 경기의 회복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 동향: 선진국 금융 시장의 호조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하락

- 미국, 일본 등 주요 금융시장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세계 최대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인 뱅가드의 대규모 투자자금 이탈과 북한 리스크 확대 등으로 하락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월 28일 2.63%에서 3월 13일 현재 2.61%로 0.02%p 하락
 - 원/달러 환율은 외국계 주식시장 투자자금의 대규모 이탈 등으로 2월 28일 1,083.0원에서 3월 13일 현재 1,099.5원으로 16.5원 상승
 - 코스피 지수도 뱅가드 자금의 이탈과 북한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2월 28일 2,065.5에서 3월 13일 1,999.7로 65.8p 하락함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3/4	4/4	1/4	2/4	3/4	4/4	2/28	3/13
실물 지표	GDP성장률(%)	3.4	3.4	3.4	2.8	2.4	1.5	1.5	-	-
	산업생산(%)	7.2	5.3	5.3	4.2	1.5	0.3	1.2	7.7	-
	소비자물가(%)	4.2	4.2	4.8	3.0	2.4	2.4	1.7	1.5	1.4
	실업률(%)	3.4	3.0	3.1	3.8	3.3	3.0	2.8	3.4	4.0
	경상수지(억달러)	54.9	126.7	69.0	25.6	111.4	145.6	149.4	22.5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8	3.41	3.60	3.45	3.39	2.88	2.81	2.63	2.61
	원/달러(원)	1,083.2	1,143.9	1,085.1	1,131.3	1,152.1	1,132.9	1,090.3	1,083.0	1,099.5
	코스피지수(P)	2,100.7	1,825.7	1,769.6	2,014.0	1,854.0	1,900.5	1,997.1	2,026.5	1,999.7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2월 28일은 1월, 3월 13일은 2월 수치임.

□ 동유럽 신흥 시장 소개 : ①폴란드 (요약)

○ 국가 개요

- 중부 유럽의 발트해(海) 연안국으로 1989년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 러시아, 체코, 독일 등 7 개 국가가 접한 중부 유럽 대평원 지역에 위치
 - 2004 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하였으나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에는 아직 미가입
- EU 소속 27개국 중에서 경제 규모는 9위, 인구 규모는 6위
 - 탄탄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동유럽의 중국이라 불릴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

< 폴란드의 위치 >



< 폴란드 국가 개요 >

면적	313천km2(한반도의 1.4배)
수도	바르샤바(170만명)
인구	3,820만명
민족	폴란드인(96.7%), 독일인(0.4%)
종교	가톨릭(89.8%), 동방정교(1.3%)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언어	폴란드어
통화단위	즐로티(PLN)
환율	약 3.26 PLN/USD(연평균)
GDP	4,700억 달러 (한국의 41%)
1인당GDP	12,302달러 (한국의 53%)

자료: 주한 폴란드 대사관, IMF, World Bank
 주: 환율, GDP, 1인당 GDP는 2012년 기준

○ 경제 및 산업 동향

- (경제) 견고한 경제성장 속에서 안정적인 물가수준 유지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성장을 지속
 - 물가상승률은 3%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으나 실업률은 10%로 다소 높은 편

- (산업) 서비스업 및 자동차·전자 등 핵심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선진화
 - 체제 전환 이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변화
 -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동차·전기전자·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

○ 성장 동력 및 잠재 위험

- (성장 동력) 중동부 유럽 최대의 인구 및 경제 규모, 외국인 투자 활성화
 - 인구와 경제 규모는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등 동유럽 주요 3개국의 총합과 비슷한 수준
 - 외국인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폴란드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
- (잠재 위험) 정부부채 증가와 경상수지 적자 누적은 잠재적 위험 요인
 - GDP 대비 정부부채는 '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2년에는 55% 수준
 - 경상수지 적자는 '9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04년 EU 가입 이후 급증

○ 한국의 對 폴란드 무역 및 투자

- (무역) 한-폴란드 교역 규모는 EU 27개국 중에서 7위이며, 한국의 對 폴란드 수출이 수입을 압도하여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1989년 체제전환 이후 한국의 對 폴란드 수출은 연평균 20%, 수입은 연평균 16% 성장
- (투자) 한국의 對 폴란드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EU 27개국 중에서 5위이며,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가 진행 중
 - 최근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투자 영역 다각화 노력

○ 시사점

- 우수한 지리적 여건, 풍부한 노동력, 탄탄한 내수시장, 해외 자본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으로 유럽 내 생산 거점 및 독일, 러시아 등 주변국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하기에 적절

□ 경제 이슈: 지하경제 해소 방안

- 투명 거래와 성실 납세 유인책 강화 필요

○ 선진국보다 높은 지하경제 규모

- 지하경제란 합법적이지만 조세회피 및 탈세 등의 목적으로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와 불법적인 거래를 의미한다. 지하경제 추정방법은 직접추계방법, 간접추계방법, 모형추계방법으로 구분된다. 이 보고서에서 간접추계방법 중 하나인 통화 수요 (currency demand) 모델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290조 원 정도로 추정되며 명목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약 23% 정도로 추정된다. 명목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선진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7년 기준 13%, 개도국은 26.2%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하경제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탈세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고, 소득 분배 악화로 인한 양극화에 기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는 복지재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 제고,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 높은 지하경제 규모의 배경

- 국내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은 원인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높고 자영업자의 실제적인 소득 파악이 힘들어 소득탈루율이 높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8.8%로 미국 7.0%, 일본 12.3%, 영국 13.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둘째, 한국의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 회피 유혹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1년 25.9%로서 2000년 22.6% 대비 3.3%p 상승하여 OECD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한국의 부패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아 지하경제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사회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 지수는 2008년까지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그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사회 각 분야의 부패 및 불투명성은 불법 자금 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비제도권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의 규제도 지하경제 형성의 원인이 된다. 경기침체로 공식경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비제도권 노동시장으로 편입되고, 노동 시장 규제로 인해 간접노동비용을 축소하거나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동기 유발도 지하경제 형성으로 이어진다.

○ 주요 선진국의 지하경제 감소 정책

- 주요 선진국은 투명거래 및 성실납부를 유도하여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은 모두 금융거래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성숙한 국민의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하경제 축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 ① 호주 국세청은 금융정보 분석센터(AUSTRAC ;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를 통한 금융자료에 포괄적 접근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의 이자지급 관련 자료에 대한 자동보고(Auto Reporting from Bank)제도를 통한 금융정보 접근도 허용
- ② 프랑스는 납세자의 생활수준과 신고된 소득간의 괴리가 큰 경우,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수준에 맞게 소득을 추계 (Indirect measures of income - presumption of income on the basis of lifestyle)하는 시스템을 도입
- ③ 캐나다는 현금 수입 업종 등 기존의 납세 성실도 분석 체계에서 누락되는 세부 정보들을 수집하는 연구 회계감사 프로그램(Research Audit Program)을 도입하여 불성실 납세의 원인을 파악. 또한, 주택개량업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
- ④ 미국은 탈세 소득 파악을 목적으로 역외계좌관련 신고 프로그램(Offshore Compliance Initiatives Programme)을 도입. 미 국세청(IRS)은 역외신용카드 프로그램(Offshore Credit Card Program)을 시행하여 미국에서 사용된 외국 금융기관 발행 신용카드의 연관 계좌 보유자 신원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시행을 통해 미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

○ 정책적 시사점

-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저항 및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높은 지하경제 비중의 배경과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책을 살펴보면, ① 관혼상제 관련 생활서비스업, 음식업, 도소매업, 교육 및 의료 분야의 자영업과 고소득 전문직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 모범 자영업자 등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해야 한다. ② 현금 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업 자영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대형 서비스업 자영업종의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조세 포탈을 방지해야 한다. ③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을 강화하여 탈세를 예방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을 강화하고, 금융정보기구와 국세청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의심거래에 대한 세무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탈세를 예방해야 한다. ④ 유사상품, 자금세탁 등 불·탈법 거래를 차단시키고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을 강화하여 탈세를 예방하고, 유사상품, 자금세탁 등 불·탈법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⑤ 노동시장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지하경제로 편입되는 비제도권 노동시장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경기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⑥ 교육을 통해 납세의무 의식을 제고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탈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조세 포탈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여 조세 포탈을 방지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김민정 연구위원 (kimmj@hri.co.kr, 2072-6212)

□ 이슈: 악화일로의 청년층 고용과 절실한 노후 준비

최근 고령화에 대한 이슈가 부각됨과 동시에 청년실업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므로 인해 청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고령화 문제는 은퇴 후 노후소득원인 연금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나, 청년실업은 경제성장 악화 및 근로빈곤의 문제와 직결되고 연금수급권과는 관련성이 적어 보인다. 그러나, 청년실업의 경우도 전생애기간을 고려할 때 노동가능기간의 감소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게 되어 연금사각지대에 빠지거나 노후빈곤으로 전락할 수 있다.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1.3%, 7.6%(2009.5)로 전 연령층과 비교할 때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들어 동 지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만은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청년층 경제활동의 일반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청년 고용의 특징에서 살펴보면, 느린 시장진입과 빠른 퇴출, 비경활과 실업상태의 모호성, 청년 남성의 두드러진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는 눈높이, 즉 본인의 실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49.6%)이라는 분석결과도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장기화는 노후의 빈곤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생활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20 대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후준비 및 인식상태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러한 청년 경제활동 상황과 노후준비 인식수준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공적 연금 가입현황도 그리 밝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특히,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청년층이 국민연금 가입에 회의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상태는 공적연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노후소득원으로써 기능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청년기의 실업에 따른 연금수급기회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여건개선과 관련하여 청년실업률 억제 및 고용율 제고를, 나아가 정규근로 형태로의 전환가능성 제고 등 노동의 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층에 대한 연금 및 노후대비 교육 및 사적연금 가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청년기 실업기간에 대한 추납제도 활용 제고를 통해 청년 연금수급권 제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청년 실업은 청년기 실업자체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애기간동안 연계되어 개인의 노후소득보장까지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기 실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청년층 경제활동 상태 및 고용특성

○ 15 세 이상 29 세 이하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악화

- 청년층 고용률은 41.3%, 실업률은 7.6%로 전체 인구와 비교할 때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은 편임
- 청년층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높은 국내 실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청년의 고용관련 지표들은 최근 들어 양·질적으로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음

○ 최근 10 년간의 청년층 취업자 감소 추세

- 청년층의 구직실태는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임
 - ILO 의 청년층 연령기준인 만 15 세에서 24 세 사이의 취업자 수 뚜렷이 감소
 - OECD 통계 결과를 보면 청년인구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대비 2 배를 상회
- 우리나라 청년층의 구직활동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만 15~29 세의 취업자 수 감소(특히 만 25~29 세보다는 만 20~24 세의 취업자 수 급감)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청년실업률은 2009 년 3 월에 8.8%로 최고치 기록
 - 2009 년 5 월 현재 전체 실업률의 2.3 배인 7.6% 기록

<청년 실업자 수 및 청년실업률 추이>

	청년실업자 수(천명)	(A)청년 실업률(%)	전체실업자 수(천명)	(B)전체 실업률(%)	A/B
2004년	412	8.3	860	3.7	(2.2)
2005년	387	8.0	887	3.7	(2.2)
2006년	364	7.9	827	3.5	(2.3)
2007년	328	7.2	783	3.2	(2.3)
2008년	315	7.2	769	3.2	(2.3)
2009년 1월	356	8.2	848	3.6	(2.3)
2월	372	8.7	924	3.9	(2.2)
3월	375	8.8	952	4.0	(2.2)
4월	348	8.0	933	3.8	(2.1)
5월	404	7.6	938	3.8	(2.3)

자료: 통계청, 「2009 년 5 월 고용동향」.

○ 청년 고용의 특징

- 구조적으로 느린 시장진입과 빠른 퇴출

-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직업경험이 일천하여 경기상황에 따라 "last-in, first-out" 하는 특성(Gunderson, Sharpe and Wald(2000))으로 (취업으로 "last-in", 비경화로 "first-out") 전체실업률에 대한 청년실업률의 비율은 전체 실업률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
- 비경화와 실업 상태가 모호
 - 청년층은 다른 연령에 비해 '취업준비' 등을 위한 비중이 높아 실제로는 구직자 임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되는 비중이 큼
 - 청년층은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간, 취업과 비경제활동 인구간 이동이 빈번하여 적극적인 구직의사 여부만으로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
 - 청년 미취업자들은 학력별로 다른 행태를 보임. 고학력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유희화되며 저학력 미취업자는 실업자로 남아 구직을 계속하는 경향을 보임(이병희, 안주엽(2002); 노동부(2008))
- 청년 남성의 두드러진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
 - 최근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주로 남성에서 두드러지며 2005년부터는 여성에서도 나타나는 경향

○ 청년 실업이 심각한 이유

- 구직에 대한 눈높이가 청년실업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청년층 실업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로 본인의 실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49.6%)이며, 다음으로 일자리 부족(30.4%)이 차지

○ 청년층 고용부진의 원인 (박강우 외, 2009)

-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감소
 - 청년층 노동력에 대한 총량적인 노동수요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 상황
 - Katz and Murphy(1992)의 방식에 따라 연령별 노동수요 변화를 산업별, 직업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면 청년층의 노동수요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한편 최근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2002~2007년 중 고용률 하락의 대부분(96.4%)을 설명
- 일자리 불일치 심화
 - 청년층의 노동공급 저하는 학력간 불일치 등 다양한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 심화, 유보임금 상승 및 고용의 질 악화에 기인
- 유보임금 상승과 고용의 질 악화
 -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의 상승과 고용의 질 악화 또한 청년층의 노동공급을 저해하고 하향취업을 유발하는 요인이 됨

□ 청년층의 노후준비 인식 (보험개발원의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참조)

○ 청년층의 노후생활 준비 평가

- 20 대를 대상으로 현재 노후생활 준비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4%, 보통이라는 의견은 34.6%,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62.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후생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대별로 각각 30 대 8.3%, 42.5%, 49.2%, 40 대 8.5%, 55.6%, 35.9%, 50 대이상 7.0%, 50.4%, 42.6%로 조사되었음
- 이는 20 대가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심각한 문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인식의 개선이 크지 않다는 점임

○ 청년층의 필요노후소득 수준에 대한 인식

- 20 대가 생각하는 필요 노후소득수준은 현재 소득의 약 57%수준으로 조사되어(30 대 54.8%, 40 대 53.1%, 50 대이상 58.1%), 국내외 연구결과(예, 강성호, 2012; OECD 등)에서 노후의 적정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약 60%라는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 소득대체율 = 은퇴후 (연금)소득/은퇴전 소득
 - 한편, 20 대를 대상으로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소득수준이 현재소득의 50%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은 23.1%, 50%라고 응답한 비율은 26.4%, 51~70%로 응답한 비율은 32.2%, 71~99%로 응답한 비율은 15.4%, 100%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2.9%로 조사됨

○ 청년층의 마련가능한 노후소득 수준에 대한 인식

- 20 대가 마련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노후소득수준은 현재 소득의 약 43.3%수준으로 조사되어, 앞의 필요노후소득 수준 57.0%에 비해 13.7%p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그만큼 노후에 대비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향후 마련가능한 노후소득수준이 현재소득의 30%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은 34.1%, 31~50%로 응답한 비율은 41.8%, 51%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24.0%로 조사
 - 향후 마련가능한 노후소득 수준은 현재 소득의 50% 이하라는 응답이 76%로 노후소득 확보에 대해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청년층의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 20 대가 생각하는 노후대비 생활자금으로 공적연금, 퇴직연금/퇴직금, 은행 예금상품, 연금보험 순으로 나타나, 50 대이상에서 선호하는 형태(공적연금, 은행 예금상품, 부동산 수입, 퇴직연금/퇴직금 순)와 선호 순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지만, 연금소득을 노후대비 중요 생활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음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48.1%, 퇴직연금/퇴직금은 12.0%, 은행 예금상품은 9.6%, 보험사 연금보험은 9.6% 순으로 조사되었음
-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20 대의 경우도 노후의 생활자금으로 공적연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퇴직 및 개인연금 등 연금형 소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청년층 공사적 연금 가입현황 및 추이

○ 청년기부터 연금수급권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청년실업을 경험한 근로자는 근로기간동안 불완전 근로상태에 직면하거나 근로빈곤층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고 이는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줄여서 연금수급권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급여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됨
 - 이병희 외(2010)에 의하면, 근로빈곤층의 사회보험 적용도가 낮아 사회보험 적용가능자와 공공부조 대상자 사이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분석
 - 국민연금 납부예외율을 연령별로 보면, 30 세를 전후하여 가장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년층이 국민연금 가입에 회의적인 것으로 이해됨

<지역가입자 연령별 납부예외자 비중 추이(2011.12)>

(단위 : 천명, %)

구분	총계	18~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빈도	4900	30	366	777	812	639	658	570	584	462	3
비율	1000	06	75	159	166	130	134	116	119	94	006

주: 비중은 해당연령구간 납부예외자 수/전체 납부예외자수×100 으로 산출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청년층(18~29 세) 국민연금 가입비율

-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비율이 제도 시행 당시인 1988 년 21.2%, 2010 년 28.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0 년 18~59 세의 평균 가입율 44.9%와 비교 시 상당히 낮은 수준
 - 그 이유로는 청년층의 납부 기피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수 있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18 세 이상을 의무가입자로 규정하나 실제로는 27 세까지 근로이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적용제외로 관리되는 것이 주요한 이유임

<연도별 연령구간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 및 추이>

(단위 : 천명)

구분			1988	1995	1999	2000	2003	2005	2008	2010
전체 (18~59세)	계	빈도	4432	7,108	10,472	11,643	12,353	12,466	14,923	14,080
		가입율	179	253	357	392	405	406	480	449
	남	빈도	3,077	5,270	7,807	8,434	8,453	8,301	9,036	8,716
		가입율	245	369	523	557	543	529	568	543
	여	빈도	1,356	1,838	2,666	3,209	3,901	4,165	5,888	5,363
		가입율	111	134	185	220	262	277	388	351
18~29	계	빈도	2,190	2,424	2,351	2,529	2,456	2,411	2,394	2,363
		가입율	212	237	236	256	264	272	284	289
	남	빈도	1,238	1,420	1,359	1,420	1,230	1,181	1,155	1,143
		가입율	234	269	266	279	256	258	264	268
	여	빈도	952	1,004	992	1,109	1,226	1,230	1,239	1,220
		가입율	189	202	205	231	272	287	306	313

주: 가입율은 국민연금납부자/연령별(전국) 추계인구×100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1 국민연금통계 연보, 2011; 통계청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재 활용.

○ 청년층(18~29 세) 공사적연금 가입비율 비교

- 2009 년말 기준 청년층(18~29 세) 의 공사적연금 가입비율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가입비율은 45.47%,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은 25.59%, 개인연금은 16.67%로 조사됨

- 전 연령기준으로는 공적연금 62.13%, 퇴직금(퇴직연금 포함) 26.58%, 개인연금 29.89%로 조사되어 청년층이 연금 가입율에 있어 다른 연령층 보다 낮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30, 40대에서 공사적연금 가입률이 증가하다가 50대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공적연금의 경우는 사적연금에 비해 50대에서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 분석됨
 - 그 이유로는 공적연금은 평균 수익비가 2수준의 확정급여 종신연금으로 사적연금에 비해 수급시점이 다가올수록 선호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살펴본 납부예외자 비중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함

<연령대별¹⁾ 공적/사적연금 가입률²⁾>

(단위 : %)

구분	29 세 이하	30 ~ 39 세	40 ~ 49 세	50 ~ 59 세	전 체
개인연금 ³⁾	16.67	40.1	37.02	22.64	29.89
퇴직금(퇴직연금 포함) ⁴⁾	25.59	33.74	27.86	17.45	26.58
공적연금 ⁵⁾	45.47	68.2	68.42	64.58	62.13

주 : 1) 2009년 현재 18-59세(국민연금 납부예외자도 가입자에 포함)

2)비중은 개인회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3)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며 연금으로 전환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도 포함됨

4)퇴직금은 직장에서 퇴직금제 시행여부가 아닌, 현재의 직장에서 응답자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임

5)공적연금은 국민연금+특수지역연금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5차년도 원자료

○ 청년층(20대)의 개인연금 가입기간 분석

- 20대의 개인연금 가입기간을 살펴본 결과, 10년 초과한 비율이 26.3%로 나타났으며, 1년 미만 가입기간이 10.5%, 1~4년 가입이 34.2%로 조사되어 청년층의 개인연금 가입기간은 5년 미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됨

<연령대별 개인연금 가입기간>

(단위 : %)

구분	1년미만	1~4년	5~8년	9~10년	10년 초과
20대	10.5	34.2	26.3	2.6	26.3
30대	1.8	32.1	32.1	7.1	26.8
40대	1.4	24.4	43.3	18.9	12.2
50대이상	0	13.4	29.2	10.1	47.2

□ 청년층 노후 대비 방안

○ 청년실업률 억제 및 고용을 제고 필요

-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실업률은 높고 고용률은 낮아 노동시장에 처한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있음
- 특히, 청년실업의 장기화는 노후의 빈곤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노동시장 환경 개선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 기회를 제고할 필요 있음.

○ 정규근로 형태로의 전환가능성 제고 등 노동의 질 개선 필요

- 청년기 실업경험자가 장기실업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정규직 채용 및 전환 기회 제고 등 노동의 질 개선이 필요함
- 생애근로 기간을 고려할 때 청년기에 실업을 경험한 자는 상대적으로 비경험자에 비해 보험료 납부의 기회가 적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청년 실업경험자에 대한 근로기회 특히, 정규근로 기회 제고 등 노동여건 개선이 필요함

○ 청년층에 대한 연금 및 노후대비 교육 및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 필요

-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후준비 및 인식상태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노후준비가 먼 미래의 과제로 여겨지는 경향 때문으로 판단되나, 청년기부터 착실한 노후준비가 미래의 노후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대비 교육이 필요함
- 특히, 노후대비 수단으로 연금제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교육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봄
- 그나마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적연금에 대한 가입상태는 어느 정도 양호한 편이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상태는 매우 낮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적연금 뿐 아니라 사적연금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청년기 실업기간에 대한 추납제도 활용 제고

- 청년기 실업을 경험한 사람은 동 기간동안 보험료에 대한 납부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급여수준이 낮을 수 있음
- 따라서, 청년기 실업을 경험하여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는 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추납제도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추납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납부예외이후 추납보험료 납부시점이 짧을수록 보험료 감액 등의 조치를 통해 청년기 실업으로 보험료 납부기회가 줄어든 자들에 대해 납부기회를 조속히 복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패널조사팀장 강성호 (02-3218-8624, ksh0515@nps.or.kr)

□ 洗心錄

□ 경험과 기억 사이의 혼동

LP판으로 자신이 좋아했던 교향곡을 감상한 사람이 있다. 그는 연주 마지막 무렵 갑자기 심한 소음을 듣고 몹시 놀랐다. 판의 끝 부분이 긁혀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음악 감상이 어떠했는지 물어보면, 아마도 그는 음악 감상을 망쳤다고 대답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지막의 소음 때문에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가 음악 감상 전부를 망친 것은 아니다. 그는 소음이 있었던 마지막 1분을 제외하면 교향곡을 감상했던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즐거운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음악 감상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전체적 평가는 나쁠 수도 있지만, 사실 음악 감상을 하는 내내 그가 느꼈던 좋은 감정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40분 동안의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체적 평가는 왜 부정적이 될까?

이는 전형적인 기억과 경험 사이의 혼동 사례이다. '경험'과 '경험에 대한 기억' 사이의 혼동은 강력한 인지적 착각의 일종이다. 앞의 사례에서처럼 일반인들은 기억과 경험을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좋았던 경험의 순간이 나빴던 경험의 순간에 비해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경험을 동질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혼동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과거 경험이 엉망이었다고 믿게 만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활을 하면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에 의존한다. 우리가 지금 선택한 최상이라고 취한 결과 혹은 미래의 전망 역시 온전히 자신의 기억에 의존한 것들이다. 문제는 기억이 사람들의 취향과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억은 항상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업 파트너와의 실패 문제도 비슷하다. 동업이 엉망으로 끝났다고 해서 파트너와 같이 동업했던 시간들이 항상 나빴던 것은 아니다. 동업 실패는 어쩌면 마지막에 긁히는 소리가 들리는 교향곡 감상과도 같다. 끝이 좋지 못했다고 해서 함께 즐거웠던 시간 모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을 제대로 못하는 두 종류의 직원이 있다.
지시한 것을 전혀 하지 않는 직원과 지시한 것만을 하는 직원.”**
크리스토퍼 콜리(1890-1957) : 미국의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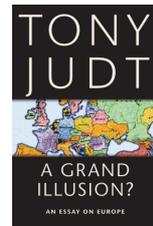
□ Book Review

□ 도서 및 저자 소개

- A Grand Illusion? An Essay on Europe (국내 미번역)

- 저자: 토니 주트(Tony Robert Judt, 1948~2010)

- 영국 태생 유대인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역사학자로 활동
- 케임브리지 대학교, UC 버클리, 옥스퍼드 대학교, 뉴욕대학교 역사학 교수
-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전쟁을 강하게 비판한 지식인



□ 주요 내용

- 오늘날의 유럽은 어떤 지역이기 보다는 하나의 이상 곧, 평화롭고, 풍요로우며 서로의 이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국제적인 공동체로 받아들여짐
 - 통합된 유럽(United Europe)이라는 아이디어는 2차 대전 이전에도 유럽에 퍼져있었고, 히틀러의 독일 제3제국도 유럽통합을 기치로 내걸음
- 그러나 가난한 동유럽과 남부유럽 국가들까지 참여하는 EU는 서유럽의 부유한 국가들이 원래 꿈꾸었던 유럽통합이 아니며 대외적으로 내세운 명분을 마지못해 현실에서 따르게 된 형국
- EU의 단초가 되었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럽이라는 결속력을 상징하지도 않음
 - 2차 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는 명목상으로 승자였지만 실제로는 패자와 다름없었고 1차 대전 후와 같은 '독일 딜레마'의 문제에 직면
 - 독일의 국력을 프랑스에 위협이 될 수준이하로 묶어 두면서 동시에 프랑스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물자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독일경제를 유지할 필요
 - 1938년 프랑스 세계최대의 석탄 수입 국가였고 독일 루르지방으로부터만 매달 42만 톤의 석탄을 수입
 - 프랑스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독립되고 강한 서독을 인정하고 이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대신 국제적인 장치로 독일을 묶어 두는 전략을 채택

- EU가 그동안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의 독특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그만큼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반복되는 것은 불가능
 - 첫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과학기술 발달은 잠재력을 확충한데다가 전 시경제체제를 통해 모든 부문에서 국가간섭의 일상화 경험이 초국 체제로의 진전도 자연 스럽게 만듦
 - 둘째, 냉전(Cold War)은 막강한 소련 앞에서 단결을 유일한 대안으로 만듦
 - 셋째, 양차 세계대전으로 왜곡되고 연기된 투자, 현대화 등에 박차를 가했고 경제와 사회 개혁도 큰 도움
 - 넷째, 서방세계는 농업생산성의 비약적인 개선을 경험
 - 다섯째, 마셜 플랜, 미국의 비약적인 성장, 트루먼 정부의 유럽에 대한 원조 등의 긍정적 인 외부요인

- “두개의 유럽이 있다. 하나는 서로를 잘 알고 있는(to know) 유럽이고 다른 하나는 알려지 길 원하는(to become known)유럽이다” - 볼테르(Voltaire)
 - 1980년대까지 유럽은 동서의 이념적인 구분이 강화될수록 서유럽국가들의 단합이 더 강 해지고 경제적 번영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음
 - 서유럽 국가들 또한 국내나 지역문제 혹은 미국이나 러시아문제에만 관심 있지 동유럽 국가들에는 무관심
 -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EU가입을 통해 유럽의 일원이 될 수 있었지만 철저히 서유럽이 만든 조건을 따라 그 자격을 얻었고 이를 통해 그들 스스로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감

- 유럽이 확대되고 이를 충족시키는 조건이 강화될수록 독일의 중심적인 역할은 더욱 부각될 것임
 - “체코는 미래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독일이 엄청나게 투자해 모든 것을 사버리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독일이 전혀 투자하지 않아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이다.”
 - 현대 유럽에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성공한 지역은 칼로링거왕국의 주요 교통과 통신 루트 역할을 했던 북해에서 알프스에 이르는 좁은 지역에 대부분 집중
 -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실질적으로 1989년 이후 유럽은 개방보다는 그 반대를 향해 꾸준히 움직였다고 할 수 있음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영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